

결혼 지원 정책¹⁾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Marriage Support Policy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자리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의 관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미혼 인구에 집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주거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의 삶에 안정을 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이 가진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 문제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혼 지연이나 포기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결혼은 이제 그야말로 선택이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를 물어 온 ‘사회조사’²⁾ 결과,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견해가 2008년 27.7%에서 2016년에는 42.9%로 증가했다.³⁾ ‘2015년 전국 출산력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긴 결혼 지원 정책은 고용과 주거 지원 분야로 본 제목의 결혼 지원 정책은 청년고용과 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 지원 정책을 의미함.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⁴⁾에서는 20~44세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분명하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혼 남성 1096명 중 74.5%, 미혼 여성 1287명 중 64.7%로 나타났다.⁵⁾ 이와 같이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생애 과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미혼 남녀 총 2383명이 ‘현재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시기여서(28.8%), 기대에 맞는 상대를 못 만나서(12.8%) 혹은 결혼보다 일·자아 성취가 중요해서(6.7%) 등으로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를 제외하고 보면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5.3%),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4.5%),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4.5%)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실업 상태여서(4.1%),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3.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 등 고용 및 경제적인 이유와 주거 문제가 전체의 24.4%를 차지한다.⁶⁾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치관에 따른 결정은 국가가 지원을 통해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결혼 계획이 있음에도 주변의 여건에 의

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결혼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묻자 전체 미혼 응답자(2383명) 중 87.0%가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혼 인구(2074명)에게 결혼 관련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청년 고용 안정화(26.4%), 신혼집 마련 지원(22.3%), 청년 실업 문제 해소(17.0%) 순으로 꼽았다.⁷⁾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면 결국은 ‘결혼할 시기의 직업적 안정성 혹은 경제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주거 공간 마련’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혼 지연이나 포기를 방지할 국가적 차원의 결혼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혼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하기 시작한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에 결혼 지원 정책으로 청년과 주

2) 가족, 교육, 안전, 복지 등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해 2년 주기로 전국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3) 통계청(2008, 2016).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7. 6. 2. 인출.

4)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을 바탕으로 가구를 선정하여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출산 행태와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출산 관련 태도를 파악하는 내용의 조사임. 기혼 여성 1만 1009명과 미혼 남녀 총 2383명-미혼 남성 1096명, 미혼 여성 12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4.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7) 통계청(2008, 2016). 앞의 책.

거 문제 관련 정책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나 주거 마련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결혼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혼 지원 정책을 대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 대책 마련을 앞두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담긴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결혼 지원에 해당하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과제로 청년 고용과 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 지원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2016년도부터의 계획이 담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 중 1년 6개월 정도의 계획만이 추진된 상황이어서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정책적 성과와 효과성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내용, 특히 현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결혼 지원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요시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성과 평가’와 2017년도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현

재 추진 중인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 정리 전에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결혼 지원 정책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본 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결혼 지원 정책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결혼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⁸⁾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분야 아래 ‘신혼부부 출발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통해 결혼을 지원하였다. 주 내용 중 하나인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 정보 제공과 지원 제도 도입’은 연령 상승과 그에 따른 가임 기간 단축 등이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만혼화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 복무 기간 중 임신, 출산, 양육이 자유롭지 않아 결혼·출산 연기, 만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장병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 지원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것 등이며 기혼 병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근무 부대를 조정하거나, 배우자 임신이나 자녀 양육

8)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함.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입영을 연기해 주거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결혼 지원 정책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내용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으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자 보금자리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리의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 등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만혼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하에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결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기혼 병사와 같은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부부가 대상인 정책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대표적인 결혼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뒤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새로마지플랜 2015'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분야 내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이 결혼 지원 정책이다.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이 추진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자격 요건 완화 방식의 지원 확대와 학생 부부를 위한 대학의 기혼자 기숙사 확대 내용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주거 부담 경감을 계획상 가장 먼저 제시하였고 기혼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결혼 지원에서 주거 부담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생각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터 결혼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표 1.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결혼 지원 분야

제1차(2006~2010년)	제2차(2011~2015년)
〈신혼부부 출발 지원〉 ●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 정보 제공 및 지원 제도 도입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본계획이 저소득 가정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녀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담고 있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결혼 지원 분야가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미혼이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결혼 지원 정책은 몇몇 주거 자금 마련 지원이 사실상 전부였다. 다소 미시적인 접근의 저출산 대응 정책 실행 10년 후,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기혼 가구 중심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미혼·만혼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미혼 인구 대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되면서 결혼 포기·지연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을 이전보다 강조하는 내용이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기게 되었다. 주거 대책 관련 내용은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있었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다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결혼 지원 분야에 포함되면서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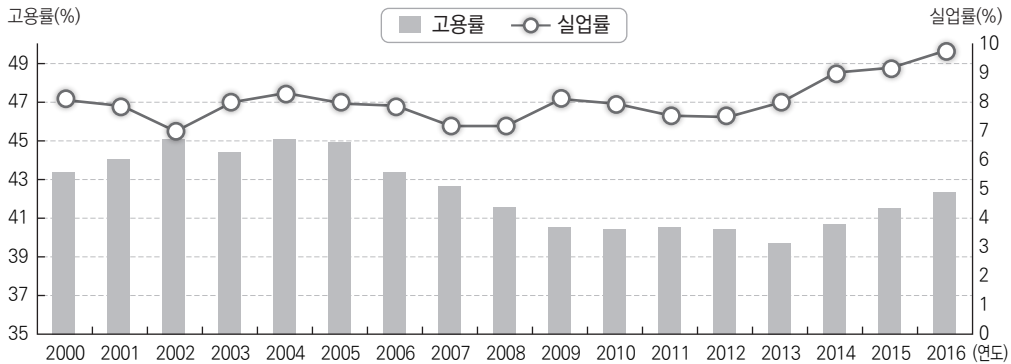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된 실질적인 결혼 지원 정책은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그 사이 주거 지원 제도는 대상 범위나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미혼 인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서 미혼 인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강력해졌고 이러한 바탕 위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차원의 청년 지원 내용이 더해졌다. 이어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결혼 지원 정책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주거 대책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청년 일자리 대책

초혼 연령 상승과 함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 여건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연기·포기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약 8%에서 2016년 약 10%까지 상승했다(그림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당시만 해도 청년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문제만큼이나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도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청년층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서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이 이전보다 강조되었다.

그림 1.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15~29세)



자료: 통계청(각 연도). 청년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17. 6. 13. 인출.

표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청년 고용 활성화〉

-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
-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결혼 지원 영역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에서 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7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의 내용

아래 상세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표 2).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와 진입할 경우의 직업 불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고용 생태계를 바꾸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청년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 일자리의 질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은 결혼 혹은 가정생활 및 육아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고용의무제와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진입 후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일자리의 질 제고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 것이다. 이를 추진할 때는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관행상 또 다른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

앞서 논의한 추진 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나 일자리의 질적 제고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의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내용은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정책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정책 내용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청년 고용을 도모하는 중심에는 청년인턴제가 있다.

‘고용디딤돌’은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정책에서 34세 미만 청년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청년인턴제이다. 골자는 대기업 등의 우수 프로그램과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2016년 1월 기준 공공기관 17개, 대기업 11개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기관 22개, 대기업 19개로 총 28개사에서 41개사로 증가했다. 그러나 훈련 인원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영 여건과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6년 훈련 목표 인원 1만 명을 달성하지 못했다.⁹⁾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무훈

련을 한 후 협력업체에서 청년인턴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 그 후 협력업체 취업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인턴과 취업이 결국 협력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기업의 상황과 함께 청년인턴·채용을 소화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두루 갖춘 협력업체의 존재가 청년 훈련생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관건일 수 있다. 또한 직무훈련기관 중 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없어 훈련 인원을 인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용디딤돌은 2016~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협력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또한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 증가를 위해 추진되어 온 또 다른 청년인턴제이다. 이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턴제에 참여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기업에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되어,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정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재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내일채움공제’라는 명칭으로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인력이 기금을 5년간 공동 적립하고, 그 인력이 만기일까지 재직하면 해당 인력에게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에도 장기 재직을 유인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청년 취업강화를 위해 2016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출범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회사와 채용된 직원이 2년 동안 각각 300만 원씩 적금을 부어 총 600만 원이 적립되고, 여기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는 이자 합산 총 12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기여금을 40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을 900만 원으로 조정해 총 1600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해 혜택받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의 폭과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이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9) 대한민국정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p.38.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중소기업의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혜 기간만큼 중소기업 근무 혹은 창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청년인턴 및 일자리 확대 그리고 청년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생서포터스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50%씩 재원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기업의 매출 증진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원뿐 아니라 청년 창업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 등이 필요하므로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패하더라도 꿈을 접지 않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내용의 정책이 될 것이다. 기업과 연계한 창업 이외에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실패로 청년들이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에 대한 내용이 함께 부각될 필요가 있다.

라.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의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 또한 추진 중이다.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도제식 훈련으로 일·학습 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 특화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등 학업 시기부터 중소기업에 연계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진입을 추구하고 있다. 즉, 산업체-고교 간, 산업체-학과 간 연계를 통해 기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예비 인력을 양성·확보하는 효과를, 학생들은 직무능력을 집중적으로 기르고 학업과 취업 사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과 고용 사이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은 다시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계 형태임을 볼 수 있다. 특히 채용 조건 계약학과와 경우 진학 전에 중소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특수성과 함께 현재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청년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마. 기타

이 밖에도 청년 고용 활성화 분야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청년 해외 취업 촉진과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이 가까운 곳에서 지원 시스템을 접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창조일자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지도와 취·창업 원스톱 지원을 해 나가고 청년들의 고용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취업이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증가하는 만큼 해외 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취업하는 직종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 취업의 질적인 면에 대한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거 대책¹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추진하는 결혼 지원 영역 중 주거 대책은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에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 과제를 보면 ‘청년·예비 부부 주거 지원 강화’, ‘학생 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결혼 지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속해 있었다. 여전히 높은 주거비용이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그로 인한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거 지원이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주거 지원은 크게 물리적인 공간 지원과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공간 확보와 지원에 관계된 정책부터 살펴본 후 자금 지원 관련 정책을 알아본다.

표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거 지원 내용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
● 청년·예비 부부 주거 지원 강화 ● 학생 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17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함.

가. 청년·예비 부부 및 학생 부부 주거 지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와 대상이 겹칠 수도 있지만 청년을 주거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청년의 고용 문제와 더불어 주거 문제 또한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내용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청년·예비 부부 주거 지원 강화’ 정책에서 청년전세임대를 공급하여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내용이다.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2016년에는 취업 준비생도 입주 대상자에 포함해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급하고 있다(2016년 8100호 공급).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으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한다 해도 집주인의 결정에 의해 입주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보증부 월세주택 인정 및 청년임대주택 계약 시 집주인에게 더욱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년·예비 부부 주거 지원 강화’라는 정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현실을 고려해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해 왔으나 신혼부부 다수가 결혼 전에 주거지를 결정짓고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

택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

현재 주거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에 이어 학생 부부로 이어진다. ‘학생 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기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 기숙사 내에 기혼자 숙소를 확충해 기혼 대학(원)생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기숙사 5개년 투자 계획(2013~17년)에 따라 국립대학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기숙사 건립 시 수용 규모의 약 5%는 기혼자 숙소로 확보하고 있다. 기혼자 숙소는 2013년 4개 대학의 약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던 것에서 2015년 기준 6개 대학의 약 250명 수준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2017년에도 계속해서 BTL 기숙사 건립에 기혼자 숙소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숙소를 기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학교마다 기혼자 숙소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타당하지만 기혼자의 실제 활용 상황이나 향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결혼 지원을 위해(예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사실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2014년 기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1만 2000호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한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오기는 했으나 신혼부부가 실제 선호하는 투룸형(36m²) 등 규모 면에서 신혼부부의 선호를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형을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 등 공공건설임대 확대와 기업형 민간임대, 공공임대 청약 시 나이가 어릴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예비) 신혼부부가 도시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는 국민임대와 5년, 10년 임대 형식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입주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만혼 추세 완화

와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1순위, 2순위 조건이 유자녀(태아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결혼 시 주거 마련이 고민인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 입주 자격을 갖게 된다.¹¹⁾

신혼부부 전세임대나 공공임대에 예비 신혼부부 지원 비율과 유자녀 신혼부부 지원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만혼화 추세 완화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투룸(36m²)형을 공급하고 교통 요충지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는 정주 여건이 좋은 교통 요충지에 단지를 건립해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단지 안전 설계, 키즈카페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서울오류, 하남미사, 부산정관, 과천지식, 성남고등, 수서역세권, 고양장항, 의왕고천, 수원당수, 화성동탄2 등 특화 단지 10곳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¹²⁾

청년 주거난이 심각한 최근에는 신혼부부에서 나아가 대학생을 위한 특화 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듯 대학생 특화 단지는 대학생의 수

11)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503.jsp>, SH서울주택도시공사 http://www.i-sh.co.kr/www/brd/m_241/view.do?seq=181095에서 2017. 6. 10. 인출.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2. 2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78659에서 2017. 6. 11. 인출.

요가 높고 통학 여건이 좋은 곳에 마련하여 대학생에게 단지 공급 물량의 50%를 공급하고 도서관, 스타디움, 무인택배함, 공동 세탁실 등 대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상반기에 대학생 특화 단지는 최초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이곳에는 입주 대상 총 362명 중 80% 이상(290명)이 청년층으로 그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222명(77%)이고, 사회 초년생이 43명(15%), 신혼부부가 25명(8%)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중에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집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한 예비 신혼부부가 18명(신혼부부 중 72%)를 차지해 예비 신혼부부를 청약 대상에 포함한 결과가 나타났다.¹³⁾

이렇게 행복주택이 확대됨으로써 결혼 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그와 함께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기존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서역세권에 건립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당초 서울 목동에 지으려던 계획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후 지역이 재선정되었다. 이에 수서 주민들은 주민 수 증가만큼 필요한 도로나 학교

등의 인프라는 확충하지 않고 주민만 증가할 경우 현재보다 주거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¹⁴⁾ 과거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문제, 그로 인한 고립 또는 주변부화 문제 등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의 기존 주민이 행복주택 건설 전부터 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일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주민의 의견 청취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해 기존 주민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기반시설 고려 등 사전 작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신혼부부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또 다른 방식은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방법이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방안에는 크게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대출'과 주택 구매 시 자금을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다. 이 두 가지 대출 중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이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활용도가 큰 정책일 것이다. 신혼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조건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2. 23.)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spage=1&id=95078897에서 2017. 6. 11. 인출.

14) 이정현((2015. 11. 30.).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놓고 서울시에 또 반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30/0200000000AKR20151130024200004.HTML?input=1195m>에서 2017. 7. 1. 인출.

김사무엘(2017. 5. 17.). 수서역 행복주택 결사반대...주민반발에 부딪힌 수서역세권 개발.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615504095312&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에서 2017. 7. 1. 인출.

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인다거나 금리를 우대하는 등 대출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전세 자금은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출은 최대 1억 400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¹⁵⁾ 그러나 도시 거주를 많이 하고 기본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신혼부부에게는 지원되는 대출금을 제외한 전세금은 개인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주택 마련 자금 지원은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고, 그 안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주거 지원 성격상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한 시기부터를 결혼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면 16년 정도 결혼 지원 정

책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이 주로 기혼 가구 중심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미혼 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부터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 위주로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혼 연령의 꾸준한 상승(2000년 기준 남성 SMAM¹⁶⁾: 30.9세, 여성 SMAM: 27.5세에서 2015년 기준 남성 SMAM: 33.9세, 여성 SMAM: 31.5세¹⁷⁾로 증가)으로 예견할 수 있는 미혼 인구 비율의 증가와 앞서 확인한 청년 실업률의 상승(그림 1) 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미혼 인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미혼 인구에 대한 결혼 지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청년 문제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혼인율도 상승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가치관의 변화와 더욱 큰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과는 국가가 접근할

15) 주택도시자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에서 2017. 6. 10. 인출.

16)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SMAM)는 혼인신고 된 자료를 기초로 혼인한 자의 초혼 연령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 초혼 연령임. 이는 미혼 인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편향을 줄일 수 있음.

17) 2000년은 김승권 등(2006)에서 재인용하였고, 2015년은 인구센서스 자료로 필자가 계산함.

김승권, 전광희, 김태현, 이성용, Hiroshi Kokima, Toru Suzuki & Ryuzaburo Sato(2006).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 없는 부분이며,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관여하려 해서도 안 된다. 단지, 청년 문제나 주거 문제 해결이 현재 미혼 인구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가 직업 안정성이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결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또는 실질적인 결혼 이행의 변화 등 저출산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효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 오래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더욱 논의하기 힘들다. 다만, 본고에서는 현재의 결혼 지원 정책을 살펴본 만큼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결혼 지원의 방향은 현재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을 통해 논의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청년이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에서 보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중소기업에서 이끌어 내려는 정책이 다수 보인다. 중소기업과 청년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현재 청년들은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현재 정부는 일자리 대책,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뚜렷한 목표

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률을 높이는 등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거기에 청년을 우선 고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목표로 하는 직장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들이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청년 지원이 기업을 통한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 즉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메우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본인의 적립금에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방식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다고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만큼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마련해야 청년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질 확보이다.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이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는 연령에 결혼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위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일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을

때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한 후에 자녀 출산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삶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은 일자리의 안정성이다. 모든 것에서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집중해 일자리 개수의 확대를 끝까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질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철저히 청년을 대상(targeted)으로 하고, 청년에게 맞추어진(tailored)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간접적이거나 중소기업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정책이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중 청년과 관련 있거나 청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모아 놓은 듯 보인다.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에는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용 등 청년이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의 문제에 더욱 적극·직접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청년 문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해 구상된 정책과 청년이 그 혜택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저출산 문

제 해결과의 관련성이 높은 청년 관련 정책 위주로 세심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주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큰 산이다. 결혼생활을 계획하는 인구 중 높은 비율이 사회 초년생이고, 청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주거 공간 마련이다. 현재 주거 문제 해결 정책은 신혼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 청년 등의 취업난과 함께 청년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받는다 해도 감당해야 하는 대출은 여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신혼부부가 생활할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후에 자녀 출산 등으로 주거 환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다시 주거 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많은 가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